



[산업] 이재용, 현장경영 시동 EUV 수급 등 파운드리 '승부수' 08



Economy

코스피 2380.48 (-22.67)	코스닥 861.48 (-10.44)
금리 (미국 3년) 0.901 (-0.022)	환율 (원/달러) 1146.90 (-0.20) (14일)

정의선 회장 취임... 현대차그룹 체질개선 속도

‘소통·자율·책임경영’ 혁신의 깃발 올랐다

현대차그룹 정의선시대 개막

“직원 역량 존중·발휘에 최선” 해외권역별 자율경제체제 도입 현장중심 의사결정 체계 강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시대가 본격화됐다.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1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 수석 부회장의 회장 선임안을 보고했다. 각 사 이사회가 동의하고 지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정 수석 부회장은 바로 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그동안 ‘소통·자율·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온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새로운 수장을 맡으면서 그룹의 체질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정의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임직원의 귀중한 역량이 존중 받고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소통과 자율성이 중시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수평적 조직 문화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회장은 소통, 자율, 책임을 중시하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고 일하는 방식에서의 변화와 혁신도 주도했다.

정의선 회장은 그 일환으로 해외 권역별 자율경영 체제를 도입했다. 2018년 미주, 인도 등을 시작으로 세계 시



현대자동차그룹은 14일 화상 이사회를 열어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장을 주요 권역으로 나누고 현지 시장 전략 수립 및 상품운영, 생산·판매 통합 운영 등 ‘자율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의 강력한 의지 아래 ‘자율성’과 ‘기회’의 확대를 통해 ‘일’ 중심의 자

율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직문화 및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연 근무제 및 직장·점심시간의 자율화를 통해 개개인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으며, 결재판을 없애고 이메일 등 비대면 보고를 확대하는 한편, 자율좌석제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프로필

HYUNDAI MOTOR GROUP

출생 1970년 10월 18일
학력 휘문고, 고려대 경영학과, 샌프란시스코대 경영대학원

경력

- 1999년 현대차 구매실장·영업지원사업부장
- 2003년 현대·기아차 기획총괄본부 부분부장
- 2005~2008년 기아차 대표이사 사장
- 2005년 현대차그룹 기획총괄본부 사장
- 2005년 현대모비스 사장
- 2009~2018년 현대자동차 부회장
- 2018년 9월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 2019년 3월 현대차,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 2020년 3월 현대차 이사회 의장
- 2020년 10월 현대차그룹 회장

연합뉴스

직급 및 호칭 체계도 축소, 통합했다. 일반직 직급 체계를 4단계로 축소하고 호칭은 ‘매니저’와 ‘책임매니저’로 단순화했다. 승진 연차 제도도 폐지했다. 임원 직급 체계는 이사대우, 이사, 상무까지의 직급을 상무로 통합해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다.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조기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재택근무도 자율 시행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노트북 지급을 확대하고 새로운 업무 플랫폼을 도입해, 자택을 비롯 장소에 구애 없이 PC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의 일라이릴리 본사 /연합뉴스

개발 중 코로나 백신 안전성 문제로 중단

“접종자에 이상질병 내·외부서 검토 중”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안전성 문제로 임상 이 잇달아 중단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릴리(이하 릴리)는 전일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3상 임상시험을 안전성 우려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릴리 폴리 매컬리 대변인은 “독립적인 안전감시위원회가 조심하는 차원에서 임상시험 등록 중단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릴리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샘플을 이용하는 단일클론 항체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단일클론 항체치료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 소식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릴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항체치료제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하면서 개발 순항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회사측은 안전성에 대한 어떤 우려가 제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하루 전인 12일에는 미국 존슨앤드존슨(J&J)이 자회사 안센이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안센은 “백신 접종자 한명에게서 미상의 질병이 발생했다”며 “내부 임상·안전 전문가는 물론 독립적인 감시 조직이 이 질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J는 지난달부터 안센의 코로나19 백신 3단계 임상을 진행해 왔다. 이 백신은 지난 8월 미국 정부에 이어 이달 8일 유럽연합(EU)과 공급 계약을 맺었다. 특히, 임상 3상 참여자가 6만명으로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기대를 받아왔다.

회사측 관계자는 “예기치 않은 이상 반응은 임상시험에서 드문 일은 아니다”라며 “이번 시험 중단은 FDA가 요구하는 시험 유보 결정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백신이 원인 미상의 부작용이 발견되며 임상 3상이 중단됐다 4일 만에 재개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내부회계관리’가 뭐길래... 기업 vs 회계법인 충돌

기업, 청와대 청원 등 제도개선 요구 회계법인 “고충 알지만 필요한 절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놓고 회계법인과 기업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모든 업무에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과 업무를 증가시킨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회계법인은 증거를 남길 수 없는 업무는 없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기업 회계 담당자들은 청와대 청원까지 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부회계관리제도 현실적 보완과 개선청원’은 14일 현재 157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청원을 검토 중이다.

청원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로 많은 기업의 재무, 회계 실무진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업무를 위한 업무 보여주기식 업무는 지양돼야 한다. 퇴보하지 말고 발전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경영의 모든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를 회계법인이 감독하는 것이다.

기존에도 내부회계는 회계법인이 검토해 왔지만 신(新)외감법 시행으로 2019 회계연도부터는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감사’로 인종절차가 강화됐다.

현재는 대기업이 대상이지만 오는 2023년까지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자산 5000억원 이상, 2022년 1000억원 이상, 2023년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된다.

현재까지는 충분히 회계 전문인력을 갖추고 체계를 갖춘 대기업이 대상이어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 새로 감사 대상이 된 2조원~5000억원 규모의 기업 회계 담당자 사이에서 불만이 터

져나온다.

중견기업에서 회계·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받으면서 기존에 하던 업무의 모든 과정에서 영수증, 스크린샷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회사 자산은 5000억원이지만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전담할 외주업체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계사들도 명확한 기준 없이 무조건 통제하려고만 하는 태도가 문제”라면서 “절차가 적절한지 보여주지 위해 또 다른 확인 절차가 만들어진다. 2023년에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된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반면 회계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기업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절차라고 말한다.

한 회계법인 회계사는 “그동안 문서화 없이 일을 해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도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잘 되어 있었다면 펀드 평가금액이 적절한지, 실제하는 자산에 투자한 것인지 등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 한영에 따르면 2020년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규모 회사들 중 88%가 여전히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부터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규모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준비가 완료됐다고 답한 곳은 2%에 불과했다.

이광영 EY한영 감사본부장은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앞둔 기업들이 복잡한 IT환경, 운영 인력, 외부감사인 요구사항 등 다양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넘어 최고경영자(CEO)부터 관련 부서 실무자까지 ‘전사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